

투데이 칼럼

농어촌 의료서비스 붕괴 우려에 따른 공중보건의 확보 시급

통계청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조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소멸위험지수에 의하면 14개 시·군중 93%인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7개 군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에서도 인구감소를 상수로 두고 지방소멸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책 및 정책을 발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당면한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는 지역 의료 인프라 부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주목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공공보건의료제도,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 부족 문제를 제일 큰 이유로 정책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개혁을 목적으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이 증가된 5058명 규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필수 의료가 베풀기 어려운 가운데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입학 정원 역시 지역 의과



김왕중
임실군의회 의원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5,000명이 필요하고 각종 변수 등을 계산해 봐도 202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비도시 지역 의료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남원시를 비롯한 9개 시·군으로, 64%에 해당한다.

의료복지 체계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해마다 줄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공보의 감소 현상의 본질은 공보의로 병역의무를 다할 자원자들의 급감과 복무 기간 및 처우에 따른 시대의 변화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의의 배치 감소로 진료가 중단되거나 요일별 순회진료를 해야만 하는 보건지소가 늘어나고 있다. 공보의

자리가 빈 지역의 주민들은 원정진료를 받아야 함에 따라 안정성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체계는 공보의 부족 문제로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입학 정원 증가의 카드를 꺼낸 정부의 정책은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을 와일드카드라고 보인다. 더불어, 이 달 20일에 농어촌 등 보건 의료의 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한의사를 포함한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농어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에 대한 수급 정책 수립, 실태 및 특성 파악을 통해 보건 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지역 이 용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여 일차진료를 담당할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1979년에 시작됐

지만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1,434명, 전북특별자치도에는 325명의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의사사각지대 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내 시·군 보건지소에는 순회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이 허다한 상황이다.

본 의원이 2018년 입실군의회 28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보의 수급에 대한 우려를 이미 예측한 바와 같이, 입실군에는 현재 24명의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다.

공보의의 부족으로 인해 입실군 역시 두 곳의 보건지소를 순회진료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올해 전역을 앞둔 공보의는 6명으로 공보의의 원활한 수급 정책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지역 의료 서비스 체계는 붕괴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의료취약지역 근무하는 공보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처우개선 역시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공보의 개념의 본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주거 및 교통 기반을 확충하고 인근 도시와 생활권 연계를 통해 개선하여 살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해 의료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할 만큼 시급한 당면문제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활기찬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면서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긴다.

가해지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김대근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설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총선 전북자치도 선거구 확정안이 통과됐다. 대신 비례대표 1석이 줄었다. 어렵사리 의석수는 사수했다. 그러나 전북 도내 일부 선거구 조정으로 입지지와 유권자에게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구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전북 의석수 감축 내용 등이 담긴 확정위원안 통과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분회의 직전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4석으로 1석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 지역 추가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오는 4월 총선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 수는 줄지 않지만,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선거구는 조정된다.

기존 군산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는 특례 설정을 통해 군산·김제·부안 갑과 을 선거구로 재편된다. 군산·김

제·부안 갑 선거구는 기존 군산 선거구에서 대야면과 회현면을 뺀 지역이다.

그리고 을 선거구는 김제·부안에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더한 지역이다. 전북 동부 내륙 지역은 완주·무주·진안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장수 선거구로 조정된다.

또 전주 병 선거구에서 인후 1동과 인후 2동이 전주 갑 선거구로 묶이고, 익산 갑, 을 선거구도 일부 세부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 의석수는 지켰지만, 총선을 겨우 41일 남기고 빨필식 선거구 조정으로 또 한 차례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인구 감소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다. 지방소멸 위기와 저출산에 나선지 이미 오래다.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전북 지역구 축소 우려, 언제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다. 불안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흔들리는 전공의

일부 전공의 사이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형병원에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이어졌다. 주로 다른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지방의 어느 대학병원은 정부에 제출한 전공의 복귀 수는 한 자리 수이지만,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있다.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는 선배 의사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병원장 명의 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이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다. 메시지는 원장뿐만 아니라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서울시보라대병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러분의 집안은 충분히 전담됐다"며 "중증·응급 환자와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 등 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아직 삼부르게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의료대안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중대 사안"으로 분류돼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나왔다. 최근 임신후 한명이 이번 사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전공의 등이 부족해 응급 수술이 지연되면서 사망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환자단체도 연일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3월은 신학기로 새로운 친구와 만남에 대한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란 학교 인입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로 학생 간 접촉이 감소함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가 2019년 대비 53.9% 감소하였으나, 2022년 대면수업 등 일상 회복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관심과 배려를 통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신고 유형별로는 폭행 32%로 가장 많았고 법률상당 28.2%, 모욕 23.6%, 성폭력 6.1%, 왕따 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TT와 미디어에서는 학교폭력을 게임으로 묘사하는 드라마와 영화까지 나오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러한 미디어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무뎠고 이를 모방할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운

영하여 학교폭력 관련 예방, 사안 대응, 사후관리, 위기청소년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며,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응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경찰과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각 가정에도 아이들과 소통을 통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를 인지했다면 가능한 빨리 112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학교 선생님 및 담당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